

KERI Brief

미·중 패권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정책방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tklee@keri.org)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강대국 간의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장기적 경쟁이며 향후 국제질서의 모습을 결정할 지정학적 헤게모니 경쟁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표면적으로는 중립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방향이다. 아직은 일부 국가 간 연합체(예를 들어 쿼드) 외에는 안보·경제 블록화 가속화가 가시화되지는 않았으나 결국에는 쿼드보다 더 큰 규모의 연합체 - 가령 쿼드 플러스 - 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자유로운 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중국의 과도한 팽창주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팽창정책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 중의 하나는 경제력이므로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 군사적 수단과 함께 경제적 수단이 동반될 것이며 이는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식의 접근방법으로는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이 반대하는 국제정치적 입장을 취할 경우 경제제재를

우려하기도 하나 중국의존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호주 사례를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호주-중국 간의 갈등과 그에 따른 각종 상호보복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중국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있어 중국의존도가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구조변화(시장다변화, 생산기지 다변화 등)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도 급격한 탈중국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전략품목 외에는 점진적 탈중국을 추진하고 있다. 차기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지향적 개방국가'로 국가정체성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안보 및 경제 협력 추진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해 적대적일 필요는 없지만 중국견제를 위해 우호국과 공동행동이 필요할 경우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미국이 원하더라도 이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대외정책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논의의 배경

-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rise)을 미국이 우려의 대상으로 주시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었으나 시진핑 등장 이전까지는 중국을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 대상으로 여겨 왔음
- 하지만 2013년 시진핑의 국가주석 취임 이후 중국의 팽창주의적 행보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협력자’보다는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들었음
 - 시진핑 주석의 등장 이후 중국과 주변국 간의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팽창정책을 추구
 -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주창하면서 아시아를 넘어 대륙과 해양을 통해 유럽까지 영향력 확대 추구
- 중국의 팽창정책 추구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세계패권에 도전하는 위협적 국가로 규정하기 시작
 - 前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이란, 북한, 러시아와 같은 선상의 위협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함
 -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시각은 前 트럼프 행정부만의 특징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초당적(bipartisan)인 미국의 대외전략임을 알 수 있음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발의되는 각종 미국의 법안들이 대부분 민주·공화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입법이 진행되고 있음
 -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은 무역제재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으로 표출

- 前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전쟁에 있어 관세를 주 무기로 썼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음
-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혈맹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중 패권경쟁은 매우 어려운 전략적 상황을 강요하는 국면임
- 특히 미국은 글로벌 가치사슬로 얽여 있는 현재의 세계화된 경제구조를 안보적 취약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공급망 강화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염병,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해 회복력(resilience)을 가진 공급망 구축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 위기에 취약한 공급망을 보완함에 있어 이미 확립된 가치사슬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당연히 보다 효율적
 -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있어 위험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보다는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의 공급망 재편 추구
 - 즉 이는 경제와 안보의 완전한 분리가 이제 가능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
 - 결국 미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은 ‘중국의 영향력이 최소화된 공급망’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한 때 회자되었던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식의 접근은 우리나라에게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옵션임을 인식해야 하는 상황임

- 즉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두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장·단기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함
- 본 보고서는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략적 선택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대외정책의 방향을 안보와 연관하여 제시하고자 함

II. 미·중 패권경쟁의 배경과 진행과정

1. 중국의 부상(rise)과 미국의 대응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세계무역시장에서 핵심 교역국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선언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2001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2019년 현재 실질GDP 규모는 미국에 이은 2위
 - PPP기준으로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규모
- 인당 실질GDP 측면에서도 한때 중국보다 앞섰던 상당수의 저개발·중진국국가를 추월(〈그림 1〉 참조)
- 또한 중국의 무역흑자는 2001년 대비 2020년 23.2배나 증가하였으며 2001년 이래 연평균 25%의 무역흑자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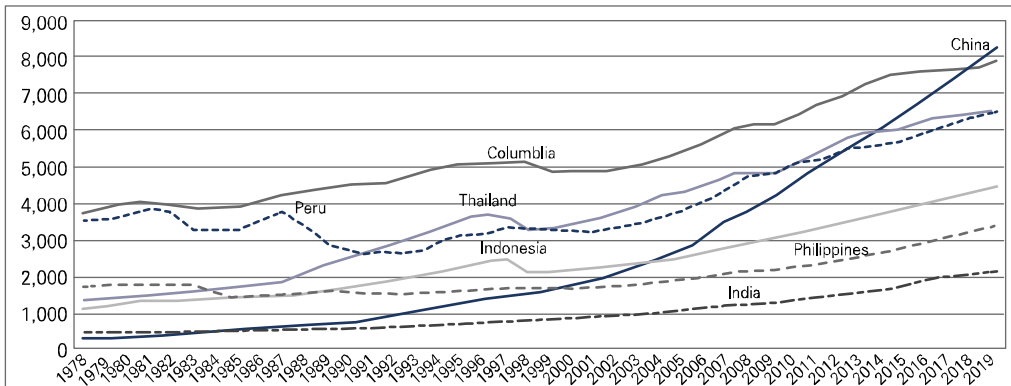
▣ 미국은 중국을 세계경제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인정함으로써 중국을 서구의 보편적 (정치·경제) 가치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판단

- 미국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찬성한 이유는 중국을 세계무역질서 내로 편입시키면서 중국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

-“--- Supporting China’s entry into the WTO, however, is about more than our economic interests; it is clearly in our larger national interest. It represents the most significant opportunity that we have had to create positive change in China since the 1970’s, when President Nixon first went there, and later in the decade when President Carter normalized relations. I am working as hard as I can to convince Congress and the American people to seize this opportunity.”

- President Clinton’s speech on China Trade Bill at the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그림 1〉 중국과 주요 개발도상국과의 인당 실질 GDP 추이



자료: World Bank Economic Indicator

<p>○ 2005년 로버트 졸릭 국무부 차관보는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규정하면서 국제질서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¹⁾</p> <p>▣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등장 이후 중국의 부흥을 기치로 팽창정책을 추구</p> <p>○ 시진핑은 이전 중국 지도자들의 대외정책방향 - 도광양희(韜光養晦), 화평굴기(和平崛起) 등 - 과는 달리 '중국몽(中國夢)'을 꿈꾸며 '주동작위(主動作爲)'를 기치로 팽창정책 추진²⁾</p> <p>- 중국은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까지 1단계,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의 2단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p> <p>▣ 중국의 팽창정책은 단순히 국력신장의 추구에 그치지 않고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연이어 일으키면서</p>	<p>영토확장을 추진함과 동시에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도 추구</p> <p>○ 오래전부터 중국과 인접국 간의 영토분쟁은 끊이지 않았으며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새롭게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영토주장을 내세워 주변 동남아 국가들을 위협하는 영토확장 정책 추구</p> <p>- 중국은 남중국해에 이른바 '구단선(九段線, nine dash line)'을 설정하여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면서 인근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 촉발</p> <p>- 게다가 2014~15년 들어서는 중국은 남중국해 산호초와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여 자국 영토화 추진</p> <p>1) Robert B. Joellick,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before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September 21, 2005.</p> <p>2) 도광양희: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화평굴기: 평화롭게 우뚝 선다. 주동작위: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p>
---	---

〈그림 2〉 남중국해 주변국 영유권 분쟁 지역



자료: 뉴스스 그래픽 2016. 7.12

<p>□ 2014년부터는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를 주창하면서 아시아를 넘어 대륙과 해양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중등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지역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하여 육상과 해상에 새로운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하고자 함 ○ 일대일로 선상의 국가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괄하는 공동체 형성을 통해 경제협력동반자관계 구축 추진 <p>□ 중국의 공식적인 명분과는 달리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참여국과 분쟁이 잦고 참여국의 부채가 급증하는 등 각종 부작용 속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 참여국들이 인프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하는 반면 공사의 과실은 중국기업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국과 중국 간의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잦고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 속출 <p>□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참여국들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 구축보다는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요충지의 확보가 그 본질이라는 평가가 다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신형대국관계' 형성을 지향하면서 미국과의 충돌을 우회하고,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존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개편하고 중국 주도의 질서를 구축한다는 세계전략을 구상"(이지용, 2015)³⁾
	<p>3) 이지용, 일대일도와 중국의 21세기 세계전략형성, 국가안보와 전략 2015, vol.15, no.3, pp.141-184</p>

〈표 1〉 일대일로 사업의 분쟁발생, 취소 전면 재검토 사례

국가	일대일로 사업	분쟁발생, 취소, 전면 재검토 사례
파키스탄	중·파키스탄경제회랑(CPEC) 다이메르-바사람건설	- 중국 이익 독차지 논란으로 사업 중단
네팔	부디 간타키 수력발전댐 건설	- 중국 기업 수주를 놓고 분쟁이 벌어져 계획 중단, 재입찰 계획 중
	세티 수력발전 프로젝트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ECRL)	- 중국 썬샤 그룹이 16달러 투자, 750MW 규모의 수력발전 계획 취소
	말레이~싱가포르 고속철(HSR)	- 네팔 정부가 국내 자원으로 진행하기로 함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	- 마히티르 총리 취임 후, 200억 달러 규모의 동부해안 철도 사업 전면 재검토 결정
미얀마	미트소네담 건설 사업	- 사업 취소 결정, 국가 부채 확대에 대한 재정건정성 확보를 이유
	차우푸크항 건설	
호주	남태평양 해저케이블 부설 사업 (남태평양 솔로몬제도~호주 시드니, 3400km)	- 2010년 중국의 자금 지원으로 건설, 2016년 운영권 양도와 지분 비율을 놓고 양국간 분쟁 발생 - 경영 악화와 부채 미상환으로 항만의 지분 85%와 운영권(99년) 중국에 양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의 합작투자	- 중국이 댐건설비용으로 전력의 90%를 쓴다는 조건, 환경 파괴 우려한 주민의 반대로 사업 중단

자료: '일대일로의 이론과 실제'(최재덕, 2018)

□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 일대일로 등의 팽창정책 추구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세계패권에 도전하는 위협적 국가로 규정하기 시작

-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⁴⁾에서 중국을 이란, 북한, 러시아와 같은 위협적인 경쟁자(competitor)로 규정
-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세계질서로 재편하려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로 규정
- 2017년 NSS에서도 과거 중국에 대한 기대는 잘못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중국과의 경쟁적 대치관계가 지속될 것임을 천명
 - “For decades, U.S. policy was rooted in the belief that support for China’s rise and for its integration into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would liberalize China. Contrary to our hopes, China expanded its power at the expense of the sovereignty of others.”- 2017 NSS

□ 2019년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를 발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위협되는 국가로 중국을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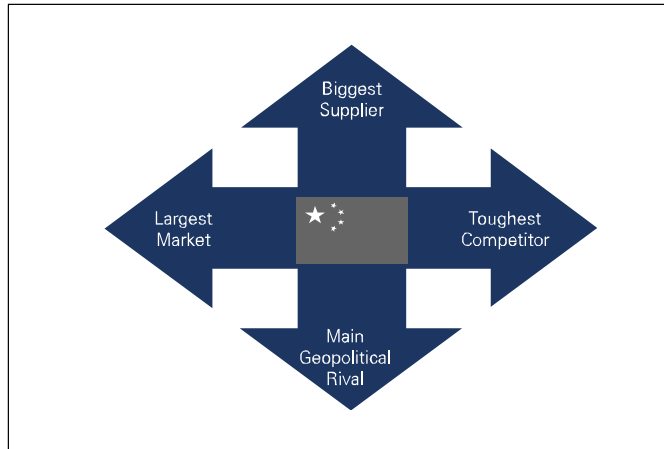
- 보고서는 수정주의 강대국인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헤게모니를 공고히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세계적 패권을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함
 - 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평화적이고 룰(rule)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설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 한 연구⁵⁾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 미국의 패권에 도전 하였던 1950-60년대 소련(USSR), 그리고 1970-80년대 일본과는 다른 차원의 위협이라고 평가

- 중국은 소련, 일본과 달리 네 개의 차원 - 시장 규모, 상품 생산력, 지정학, 경쟁 - 모두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평가
- 소련은 미국과 이념적, 군사적 경쟁관계였지만 상품생산, 시장, 경제적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경쟁관계가 아니었음
- 한편 일본은 상품생산/산업 차원에서 경쟁적 관계였지만 미국의 핵심 시장도 아니었으며 군사적, 이념적 경쟁관계는 아니었음
- 하지만 중국은 서방세계에 큰 시장을 제공하면서 경제적, 군사적, 지정학적 이해에서도 경쟁관계이므로 거의 전방위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큰 시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대기업의 주요 공급자이기 때문에 (주요 대기업의 이해에 반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

4)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는 법에 의해 백악관이 매년 발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보고서임
 5) Moschella, David and Robert D. Atkinson, ‘Competing with China: A Strategic Framework’,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Aug. 2020

〈그림 3〉 네 개 차원에서의 중국의 위협



자료: Moschella & Atkinson(2020)

□ 중국을 군사적 방법으로 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은 무역제재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표출

- 2018년 7월 미 무역대표부가 2천억 불 규모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 중국의 보복관세가 이어졌고 추후 상호 간 관세전쟁 양상으로 확산
- 2018년 12월 이후 관세전쟁은 휴지기 - 재개를 반복하다 2020년 1월 미·중 양국은 'Phase one' 협정에 서명하게 됨
 - 협정 이후 2년 간 중국은 2017년에 비해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 추가 수입하되 첫 해 767억 달러, 두 번째 해 1,233억 달러 추가 구입
 - 중국은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강화하고 인위적 외환시장 개입 중단
- 2021년 2월까지 중국은 'Phase one' 협정에서 약속한 미국 수출품 구매액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

2. 미·중 전략경쟁의 전망

-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국가 전체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경쟁은 수십 년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고 의회보고서는 전망⁶⁾
- 중국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체제와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쟁이기도 하므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한 체제임을 증명할 필요
 - 보다 많은 나라들을 미국의 동맹 시스템 내로 포섭(최소한 미국에 대한 우호국으로 편입)해야 하므로 미국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어야 함

6) Robert D. Blackwill, 'Implementing Grand Strategy Toward China: Twenty-Two U.S. Policy Prescriptions', Council Special Report No. 85,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 2020

<p>□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국과의 경쟁의 최전선으로 인식하면서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협력강화를 천명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강화의 목적 중의 하나가 안보 불안 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시대로 진입 ○ 따라서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있어 인도가 핵심국가로 부상하고 군사적으로도 미국과 인도 간 협력관계는 강화될 전망 <p>□ 2021년 1월 비밀해제된 미국의 전략문서⁷⁾에 따르면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습(아래 표)은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정치적·군사적으로 중국의 영향이 최소화된 평화적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反중국(최소한 非중국) 국가들가 미국 간의 경제·군사 블록이 형성되면서 점진적 탈중국(decoupling)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 통상차원에서는 이미 미국의 수출입에서 중국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 중 <p>7) 원래 해당 문건은 2018년 작성된 후 25년 후, 즉 2043년 비밀해제 예정이었으나 이례적으로 전체 중 일부분을 2021년에 비밀해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견제라는 미국의 핵심 안보전략기조를 다음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공개한 것으로 다수가 해석하고 있다.</p>
---	---

〈표 2〉 미국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도-태평양 지역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습(Desired End States)

1. 북한은 미국 또는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한반도에 핵무기, 화학 무기, 사이버 무기, 바이오 무기가 없는 상황
2.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우위 유지, 그리고 이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와 파트너십 유지
3. 미국과 이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가능케 하는 주권, 항해 및 비행의 자유, 무역 및 투자 기준, 개인의 권리와 법치 존중, 군사 활동의 투명성의 원칙을 옹호
4. 자유시장경제가 아시아의 주류이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
5. 지역 분쟁은 강제 없이 합법적으로 해결
6. 동남아시아는 강화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을 통해 비즈니스, 안보 및 시민 사회에서 더욱 긴밀하게 결합되고 미국 및 동맹국, 그리고 주요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
7. 동남아시아는 비 ASEAN 국가의 최소한의 지원으로 테러 위협을 관리 가능
8. 안보 문제에 대해 인도의 주 파트너는 미국이며 해양 안보를 보존하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및 기타 상호 관심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며 인도는 중국의 국경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
9. 인도는 남아시아에서 인도양 안보를 유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경제, 국방 및 외교 협력을 확대
10. 미국과 모든 미국 파트너십 국가들은 그들 국가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중국의 모든 활동에 저항

자료: U.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The White House, 2021)

III.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

1. 북한의 핵위협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며 북한의 핵무기야말로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최고의 안보위협임은 자명한 사실

- 북한 김씨 정권의 목표 중의 하나로 북한 통제 하 통일(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김정일은 사망 전 유언으로 '조국통일은 우리 일가의 궁극적 목표'라고 천명⁸⁾
- 2017년 9월 북한은 지금까지 있어온 실험 중 가장 큰 규모의 실험을 단행하였으며 당시 실험의 지진 파 규모에 대한 초기 측정값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상향 조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50KT 수준인 것으로 추정

- 250KT급 핵탄두 미사일이 뉴욕과 서울에서 폭발할 경우 각 2,900만여 명 및 3,200만여 명의 사상자 초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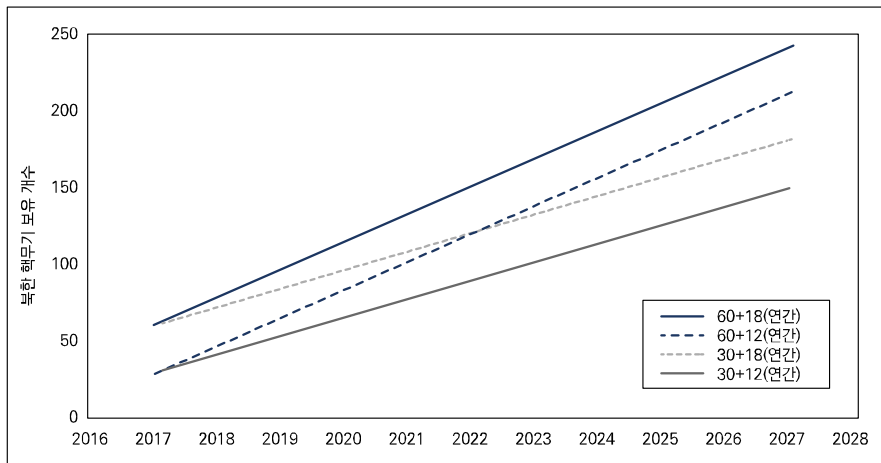
○ 2017년 현재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30~60개 정도로 미국 정보기관이 추정하였으며 이후 연간 12~18개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 전망에 따르면 북한은 2027년까지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핵공격이 가능하려면 핵무기 운반능력이 중요한데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이 능력을 키워 왔으며 이는 미국의 안보에도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음

8) JoongAng Daily. Kim Jong-il's final orders: Build more weapons. January 29, 2013.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13/01/29/politics/Kim-Jongils-final-orders-Build-more-weapons/2966344.html>

〈그림 4〉 북한의 향후 핵무기 보유량



자료: 베넷 외,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RAND연구소·아산정책연구원, 2021

-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 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1993년에는 일본 도쿄 타격이 가능한 사정거리 최소 1,500km의 노동미사일 시험에 성공
- 그 후 2004년에는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4,000km 사정거리의 무수단미사일을 배치
- 북한은 2017년 7월 최초의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14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2017년 11월에는 화성15의 시험발사를 마쳤는데 화성15호는 사정거리가 13,000km 이상으로 미국 본토 서부지역 타격이 가능
- 북한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화성 15보다 더 크고 발전한 형태의 미사일의 공개하였는데 이 미사일에 MIRV⁹⁾ 기술 탑재 가능성도 제기

□ 이 같은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할 때 재래식 전력에 있어 한국의 우위는 국지전이 아닌 본격적 전쟁 발발 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핵우산은 국가생존에 있어 필수적

- 북한의 핵능력은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미국에 대한 협박, 강제효과를 발휘하여 자신의 의사 및 행동을 관철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무기로 활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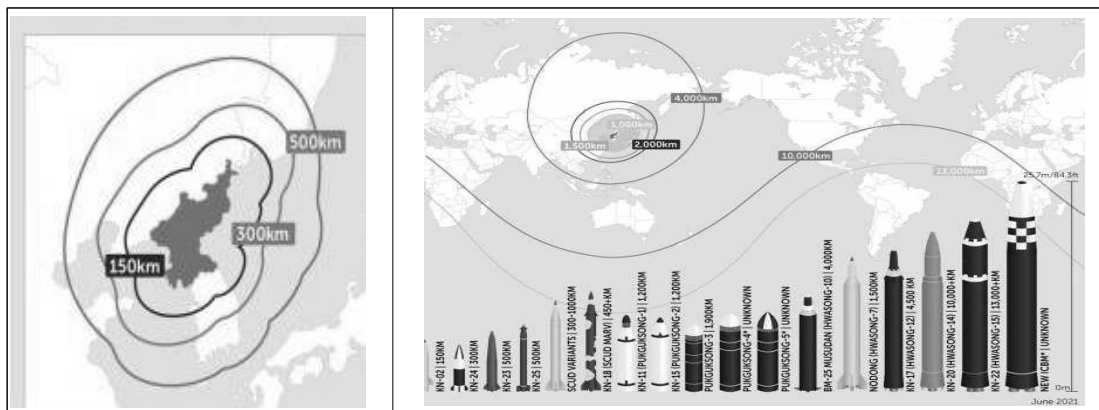
- 예를 들어 국지적 선제공격을 통해 한국의 특정 지역을 점령한 후 반격 시 핵공격을 하겠다는 위협을 하여 반격을 무력화하고 이후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음

□ 어떤 형태의 핵도발과 위협도 북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북한 지도부에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전력과 정보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긴밀한 한·미동맹이 필요

-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 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며 따라서 핵무기 사용을 통한 이익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압도적 對북한 군사력(핵전력 포함) 유지

9) MIRV(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로켓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싣고 대기권 밖에서 분리시켜 각각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무기(다탄두 미사일 기술)

〈그림 5〉 북한의 탄도미사일 현황



자료: CSIS, <https://missilethreat.csis.org/country/dprk/>

-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시 지하은닉을 통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김정은의 위치를 한·미가 알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킬 수 있는 정보력 확보
- 북한 핵무기의 소재 파악과 핵무기 발사를 위한 이동 움직임 탐지가 가능한 정보력 필요

2. 북핵 억제를 위한 중국의 한계

□ 북한 핵억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승절에 참가하는 등 북한 핵억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 친중 행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
- 북한 핵개발 진전에 대한 우려 표명 등 구두개입 정도만 있었지 중국의 실질적인 북한 압박은 거의 없었음
- 오히려 중국은 안암리에 UN의 북한 제재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¹⁰⁾

□ 중국의 북한핵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이며 '쌍궤병행(雙軌並行)'과 '쌍잠정(雙暫停)'을 기본입장으로 삼고 있음¹¹⁾

-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 모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아야하며, 자생적 개발은 물론 외부로부터 유입되지도 않는' 상태
- 이는 결국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없는 상태이며 사실상 한·미동맹의 와해를 의미

- 중국은 여기에 더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쌍궤병행'과 북한의 핵개발과 한·미의 군사훈련을 동시에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는 '쌍잠정'을 주창

□ 핵강국을 국가의 사활적 목표로 삼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게 현재 정도의 중국의 對북한 입장은 북한핵 억제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님

- 북한 정권으로서는 핵무기 보유는 사활의 문제인 반면 중국으로서는 지역 내 무력충돌로 인한 큰 혼란이 없는 한 북한핵은 자국의 이해를 해치는 수준이 아니므로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중국도 동맹국인 북한의 핵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으므로 북핵 제거에 중국은 관심이 없다"는 진단도 제기(김동식 북한학 박사)¹²⁾

- 오히려 북한 정권이 붕괴함으로써 초래될 역내 불확실성이 더욱 중국의 이해에 反하므로 북한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중국은 원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 정도로 중국이 강하게 압박할 동기는 사실상 없음

□ 한편 미·중 간 패권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북한이 중국에게 가지는 전략적 가치는 증가하므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 핵을 용인하고 북한과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필요한 상황

-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력, 국방력 분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핵은 그런 관점에서도 중국에 유용

10) 미 국무부 "중국, 유엔의 대북 제재 무력화"(경향신문, 2020. 12. 2)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2022050005#c2b)

11) 김한권(국립외교원),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 변수'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 및 중국의 역할, 그리고 남북관계' 전문가 간담회 모음집, 2018. 12)

12) <https://www.ajunews.com/view/20210624074950400>

IV.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경제정책방향

1. 미국 중심의 정치·경제 블록에 적극적 참여

□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속한 미국 중심의 정치·경제 블록에서 이탈하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

- 세계 주요국의 안보정책은 집단안보를 핵심 축으로 운영되는 추세
- 따라서 집단안보 그룹에서 이탈하여 독자적 안보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역량으로는 어려운 과제이며 효율성 면에서 있어서도 선택지가 아님
- 공식적 군사 동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동맹에 준하는 우호국들과 미국의 GDP 총합은 세계 GDP의 65.83%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블록에서 이탈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치명적 손해
 - 미국의 공식 동맹국과 동맹에 준하는 우호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약 49개국으로 분류
- 한편 중국의 우호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 러시아, 이란 등은 정치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이라고 분류되기 어려우므로 '자유진영 vs. 반자유진영'이라는 대결구도 하에서 어느 편에 설지는 자명
 -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체제 하의 통일을 지향한다면 우리의 전략적 선택의 방향은 한·미동맹의 축에서 벗어날 수 없음
 - 미국 주도의 블록에 속하지 않고 친중 그룹에 속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중국의 행태를 볼 때 우리나라의 이해를 보장해줄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자 하는 중국의 시도를 막고 우리나라의 이해를 관찰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 확보 필요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계모니를 중국이 장악할 경우 중국 중심의 수직적 국제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과거 중화질서의 부활)될 것이므로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
-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국가 전체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행해야 하는 장기전으로 판단
 - 중국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체제와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쟁이므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한 체제임을 증명해야 미국의 글로벌 지위유지 가능
-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은 단시간에 끝날 성격이 아니므로 장기간에 걸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 없는 상황
 - 단기적·일시적으로 미·중 갈등이 봉합되어 소강상태로 갈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전략경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오히려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질서구축 참가를 공식화하고 블록의 핵심 일원으로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우리나라에는 득이 되지 않는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事前)에 회피할 수 있도록 의제설정 등에 관여하는 등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갈 필요
 - '전략적 모호성'은 집단안보 블록에 속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국제정세 변화에 휘둘리는 결과 초래
 - 쿼드 플러스 참가 예상국으로 꼽히는 뉴질랜드, 베트남도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가 매우 높은 국가이므로 이들 국가와 이해를 공유하면서 역내 질서구축에 기여할 필요

2. 중국과의 갈등 시 경제적 영향의 가능성

▣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크지만 정치·안보로는 대립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중국을 견제하는 국제정치적 입장을 취하였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제재의 영향에 대한 평가 필요

▣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중국비중이 25% 내외로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높는데 호주는 30% 이상으로서 훨씬 더 높은 중국 의존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중국은 호주의 외국인투자 10대 국가(2019년 누적 기준, 9위) 중의 하나이며 홍콩이 5위를 차지

- 홍콩까지 포함하여 중국으로 묶으면 중국+홍콩은 호주의 외국인투자 5대 국가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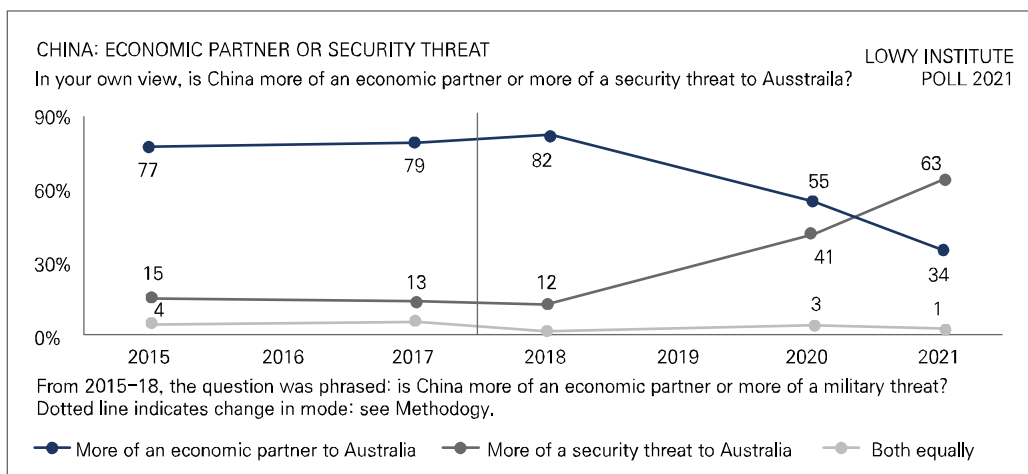
○ 호주는 중국인이 선호하는 유학지 중의 하나로 호주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중 1/4 이상이 중국인임 (2020년 1~10월 호주의 전체 외국인 입학생 약 86만 명 중 중국인은 약 23만 명으로 26.3%를 차지)

▣ 호주는 쿼드의 일원으로서 미·중 경쟁에서 사실상 중국의 반대편이기도 하고 호주 내부에서는 반중 감정이 급증하면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도 고조

○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호주의 경제동반자 (economic partner)라는 인식이 2018년에는 82%였으나 2021년에는 34%로 떨어지고 대신 안보를 위협하는 경쟁국가라는 인식이 63%로 급증(그림 6) 참조

○ 한편 호주가 홍콩보안법 반대 공동성명에 참가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자 호주-중국 관계는 급랭

〈그림 6〉 호주의 중국에 대한 여론 변화



자료: Lowy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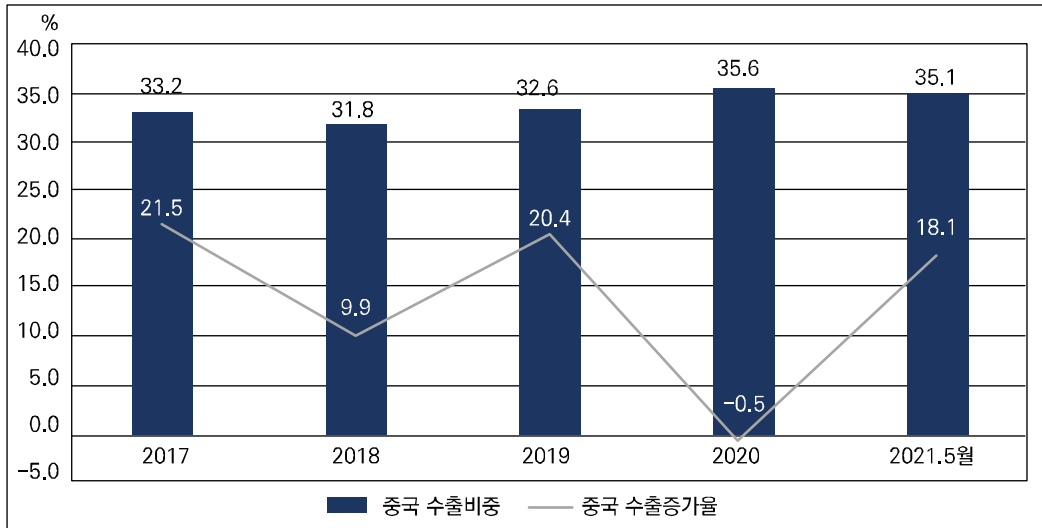
<p>□ 2020년 5월부터 중국은 호주에 대한 보복성 무역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호주에 이에 대응한 조치들을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5월11일 중국은 호주 육류가공업체 4곳을 대상으로 소고기 수입금지를 발표하고 며칠 후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등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 개시 ○ 이후 중국은 호주산 와인, 석탄 등에 반덤핑 관세 부과, 통관 절차 상 보복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보복 조치를 추진(부록의 호주-중국 분쟁 일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에는 2021년 6월 중국은 호주 기차바퀴 등을 반덤핑 조치로 WTO 제소 ○ 호주는 2020년 6월 「외국인 내정간섭 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관영매체 기자 4명 자택 압수수색하고 9월에는 안보문제로 중국인 교수 2인 비자 박탈하는 등 반격에 나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호주는 다양한 반중 협력체에 가입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대중국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중국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 ○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對중국 의회간 연합체 (IPAC: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공급망 복원 이니셔티브(SCRI: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가 호주가 가입된 대표적인 반중 협력체라고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 조직을 통해 안보·경제 차원의 반중국 국제협력을 도모
---	---

〈표 3〉 호주의 주요 반중 연합체 가입 현황

연합체	회원국	목적	호주 중국 갈등 관련 대응
파이브 아이즈 (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안보 관련 기밀정보 공유	- 호주 외 회원국이 수입제한 품목으로 지정한 호주산 제품을 대신 수입하기로 함 - 중국에 대한 공동 보복조치 검토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 (IPAC)	〈총 19개국〉 - 유럽: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체코, 리투아니아 - 북미: 미국, 캐나다 - 아시아·태평양: 호주, 뉴질랜드, 일본 - 아프리카: 우간다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전략 모색	호주산 와인 소비 촉진 캠페인
공급망 복원 이니셔티브(SCRI)	일본·인도·호주	상호 공급망 강화 및 중국의존도 축소	

자료: 최근 호주·중국 갈등 관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년 12월)

〈그림 7〉 호주의 대중국 수출비중과 증가율



자료: 무역통계, 저자 계산

□ 하지만 이 같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대중국 수출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호주의 중국 수출비중도 갈등 시작 전 년도보다 높아진 상황

- 호주의 중국 수출비중: 2019년 33.6% → 2020년 35.6% → 2021년 1~5월 35.1%
- 대중국 수출증가율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0.5% 감소하였을 뿐 2021년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8.1%의 양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20년의 마이너스 증가율도 다른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감소 폭에 비하면 양호하였던 편(대일본 수출 -29.6%, 대한민국 수출 -8.6% 등)

□ 정치적 갈등 상황과 그 영향으로 단발성의 무역보복 조치가 있었지만 통상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단기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손해이므로 호주의 중국수출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

- 무역은 상호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지금의 교역대상이 현재 선택가능한 여러 후보 중 최선의 상대이기에 거래를 하는 것임
- 따라서 일부 상징적인 상품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조치가 있었지만 중국의 호주로부터의 수입구조 자체를 크게 바꾸는 것은 중국에게도 이익이 아님
- 우리나라도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보복이 있었지만 일부 기업과 산업(한류로 대표되는 대중예술)에 국한되어 있어 대중국 수출비중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음
 - 오히려 2018년에는 중국 수출비중 소폭 상승(2017년 24.8% → 2018년 26.8%)
 - 우리나라 중국 수출품 70% 이상이 중간재이므로 무역중단은 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침

□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선택으로 인해 중국으로 부터의 경제보복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장기적 구조변화를 추진할 필요

- 사드 사태와 같이 일부 품목 또는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중국수출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임
-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감소한다면 이는 국제정치적 영향보다는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 저하 및 중국 상품경쟁력 증가로 중국 국내산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큼
 -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맞서 주요 상품에 대한 국산화를 강력하게 추진 중
 - 과거 1~2년 정도로 앞서가던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이제 사라져 전체 기술수준에서는 중국과 동등 → 2020년 기준 세계 최고 기술수준인 미국을 100%로 볼 때 한국은 80.1%, 중국은 80.0%의 수준
 - 4차산업 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인 ICT/SW 부문만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술수준이 앞선 상황 → 2020년 기준 최고 수준인 미국 대비 우리나라는 83.0% 및 중국은 85.7%
- 일본의 경우 본국으로의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로의 기업이전도 지원하면서 탈중국을 위한 장기적 구조변화를 추진 중
-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노동비용 및 생산비용 등)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는 중이며 인도, 동남아 등 다른 시장이 확대되면서 시장으로서의 비중도 점차 낮아질 전망
 - 이 같은 글로벌 경제구조변화를 고려하여 중국의존도를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지향적 개방국가로서의 위상 재정립

□ 2022년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향할 국가정체성(identity)을 세계 자유진영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가치지향적 개방국가'로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가치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이며 이 가치를 향도(嚮導) 삼아 안보와 경제에 있어 개방적인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여야 함
 - 즉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면 어느 국가와도 적극적인 안보와 경제협력을 논의 및 추진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할 것임
 -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이 같은 국가정체성의 바탕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이 같은 국가정체성을 확립하여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미국과 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질서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야말로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는 선택이 되는 것임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야만 중국에 대한 견제에 있어 명분을 얻을 수 있으며 우호국의 지원도 보다 수월하게 건인 가능
 - 미·중 전략경쟁에 있어 단순히 미국 편에 선다는 것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유지되는 국제질서 - 안보 및 경제질서 - 구축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우호국과 협력 추진
 - 경제적 자유(특히 지적재산권 보호)와 인권 보호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하여 통상원칙을 설정하는데 기여

V. 요약과 결론

-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강대국 간의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장기적 경쟁이며 향후 국제질서의 모습을 결정할 지정학적 헤게모니 경쟁임
- 우리나라는 사실상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표면적으로는 중립적(또는 중립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방향임
 - 아직은 일부 국가 간 연합체(예를 들어 쿼드) 외에는 안보·경제 블록화가 가속화가 가시화되지는 않았으나 결국에는 쿼드보다 더 큰 규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연합체 - 가령 쿼드 플러스 - 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자유로운 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중국의 과도한 팽창주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
- 중국의 팽창정책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 중의 하나는 경제력이므로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 군사적 수단과 함께 경제적 수단이 동반될 것이며 이는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
- 소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식의 접근방법으로는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취해야 할 정책방향이 아님
 - 굳이 안보와 경제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국가생존을 결정짓는 안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안보위협 노출도가 우리나라보다 덜 한 일본도 미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은 이미 안보와 경제를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방향을 정립한 상태
- 중국의 국가적 성격과 지정학적 이해를 고려할 때 친중적 행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복핵 제거 및 우리나라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님
- 중국이 반대하는 국제정치적 입장을 취할 경우 경제 제재를 우려하는 경향도 있으나 중국의존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호주 사례를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
 - 2020년부터 시작된 호주-중국 간의 갈등과 그에 따른 각종 상호보복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중국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있어 중국의존도가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구조변화(시장다변화, 생산기지 다변화 등)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함
- 미국도 급격한 탈중국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전략품목 외에는 점진적 탈중국을 추진
- 차기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지향적 개방국가'로 국가정체성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안보 및 경제협력 추진을 표방할 필요
 - 중국에 대해 적대적일 필요는 없지만 중국견제를 위해 우호국과 공동행동이 필요할 경우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명분으로 삼아야 함
 - 이는 달리 말하면 미국이 원하더라도 이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대외정책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가치지향적 국가 정체성의 고수

〈부록〉

〈부표〉 호주-중국 갈등 관련 주요 일지

날짜	주요 내용	
	통상	외교
20.04.21		호주, 미국·독일·프랑스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촉구
20.05.11	중국, 호주 육류가공업체 4곳 대상 소고기 수입 금지 발표	
20.05.18	중국,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80.5%) 부과 발표	
20.06.06		중국, 호주 내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증가 이유로 호주 방문 자제 권고
20.06.26		호주 정보당국, 「외국인 내정간섭 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관영매체 기자 4명 자택 압수수색
20.07.23		호주, UN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선언문 제출
20.08.18	중국,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20.08.31	중국, 호주산 와인에 대한 정부 보조금 조사 착수	중국,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중국계 호주인 앵커 구금 발표
20.09.07		중국 상주 호주 언론인 2명, 중국계 호주인 앵커 사건 연루로 억류 위기 속 호주 귀국
20.09.09		호주, 안보문제로 중국인 교수 2인 비자 박탈
20.09.24		중국, 반중 호주 학자 2인 입국 금지
20.10.16	중국, 자국 방적공장에 호주산 면화 사용 자제 지시(비공식적)	
20.11.06	중국, 호주산 석탄, 보리, 목재, 랍스터, 와인, 구리, 설탕 수입 제한(비공식적)	
20.11.18		호주 중국대사관, 호주 언론사에 호주의 14가지 반중정책 공개하며 철회 요구
20.11.19		호주와 주요 선진국,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우려하는 공동성명 발표
20.11.27	중국, 호주산 와인에 반덤핑 관세(107.1~212.1%) 부과 발표	
20.11.30		중국 외교부 대변인, 트위터에 호주 군인의 민간인 학살 의혹 합성사진 게시

20.11.30		중국 외교부 대변인, 트위터에 호주 군인의 민간인 학살 의혹 합성사진 게시
20.12.08		호주, 주정부·외국 간 맺은 협정에 대해 연방정부에 거부권 부여
20.12.09		호주,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
20.12.10	중국, 호주산 와인에 상계관세(6.3~6.4%) 부과 발표	
20.12.14	중국 『환구시보』, 호주 석탄을 제외한 석탄 수입 통관 절차 면제 보도	
20.12.16	호주, 중국의 호주산 보리 반덤핑 관세 부과에 WTO 제소 추진 공식 발표	
20.12.22	중국, 호주 원목에 대한 통관업무 전면 중지	
21.02.03		호주, 덴 테한 무역장관 무역 갈등에 대한 대화 촉구
21.02.17	호주, 와인산업 와해 위기	
21.03.12		호주, 중국 공영방송 송출 중단
21.03.28	중국, 호주산 와인 116%에서 218%로 관세 부과 발표	
21.03.31	중국, 선전시에서 호주산 와인 1만 1,000L 압류	
21.05.04		호주, 국가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중국기업의 다원항에 대한 임대 취소 검토
21.06.08		중국, 허란산 일대 산지 “제 2의 보르도로 만들겠다” 선언
21.06.09		호주, G7에 중국 경제 강압에 대한 WTO 개혁 호소
21.06.20	호주, 중국의 호주산 와인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정식 제소	
21.06.25	중국, 호주 기차바퀴 등 반덤핑 조치 WTO에 제소	
21.07.21		호주-미국, 중국에 대한 견제로 호주와 디지털 무역 협력 선언

자료: 저자 작성, 『최근 호주중국 갈등 관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년 12월)